

민주, 총경 인사·與전대 맹폭...“경찰국 개입·전당포기 대회”

“경찰국 반대 총경 문책 주장有”

“반기들면 보복한단 공포 심어”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총경 인사, 국민의힘 당권 경쟁, 검찰 수사 등을 망라해 대정부 파상공세를 벌였다.

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근 경찰 총경 인사를 상기하고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 전국 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28명은 경정급 조직에 해당하는 직책에 발령 됐고, 12명은 통상 임기 1년이 기준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만에 단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서장을 역임한 총경 보직을 거친 사람을 한 계급 아래인 경정급 보직으로 강등시킨 것”이라며 “경찰 내부 계서관엔 보복성 인사란 글이 상당수 게시됐다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총경 이하 인사는 경찰청장 권한이나 이번 인사엔 대통령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 의견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반기를 든 인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복종하지 않으면 보복을 한다는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경찰국 설치 관련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을 112 상황실장 등 경정 자리에 배치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이상민 행안부의 블랙리스트”라고 말했으며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고위원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연계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지적도 쏟아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당포기 대회인가, 전당포기 대회를 하나”라며 “유승민 죽고, 나경원 죽고, 이제 안철수마저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여당

측 비난을 소개하고 “그럼 이런 반정부 인사, 반국방 인사와 단일화를 한 건가. 후보 단일화한 건 친북, 반북 좌우합작, 국공합작인가”라고 했다.

또 “용산공은 당권을 전당포에 맡겨 놓은 듯 지명권을 행사하려는 것 같다”고 했으며, 안 의원에 대해선 “자업자득이다. 안운 단일화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전대가 학살의 장이 되고 있다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에 이어 누가 대상이 될지 지켜본다”고 했다.

이에 더해 “특정 언론사를 세무조사, 감사, 검찰 수사하고 파업으로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노동자들을 향해선 탄압, 공안동지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야당을 잘라내려 당 대표를 털고 전 정권을 짓밟더니 언론, 경찰, 노동자, 자신을 편까지 잘라낸다”며 “민주당은 폭압에 짓밟힌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원 사이에선 이재명 대표 상대 수사를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백현동 의혹 관련 강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사에 대해 “이재명 소환을 앞둔 바람잡이용 압수수색쇼”라며 “이마저도 식상하다”고 비난했다.

또 “뭔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려는 것”이라며 “대장동에서 성남FC로, 쌍방울로, 다시 백현동으로 돌려막기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제시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정도 됐으면 털어 봤는데 없다, 깨끗하다고 국민께 고백하는 게 도리”라며 “그런데 김건희 수사는 안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김정희 도의원 “긴급돌봄 시스템 갖추고 지원 확대 방안 강구해야”

전남사회서비스원, 전남도민 호응 좋은 긴급돌봄...원스톱 시스템 필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최근 전라남도사

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긴급돌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면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스톱으로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돌봄사업은 질병·사고와 같은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남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061-287-8150)이 맡고 있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강성희)은 “지난해 미연륙 섬지역을 대상으로 한 돌봄특화사업 ‘다도예’를 포함해 총 403건의 긴급돌봄을 지원했다”면서 “현재 읍면동사무소나 복지시설을 통해 신청받고 있고 1588 같은 전화번호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세 명의 아이를 기르는 맞벌이 부부가 연휴 기간에 한 아이가 아픈데 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돌봄 전화번호로 바로 연결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을 늘려 돌봄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민주 “집회 통제 시행령, 尹 말한 소통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앞 집회를 법원이 허용하자 바로 핏수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며 “집회를 막는 핏수 시행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소통인가”라고 비난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교통 소통 명목으로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로 등 집회를 통제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을 부정하더니 이제 법원 판단마

국가경찰위 시행령 의결에 반발

저 부정하려 한다”며 “용산으로 이전하며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한 건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던 법치주의가 결국 위법한 시행령을 앞세워 마음대로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뜻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 소통은 도어스테핑 중단, 언론사 고발로 퇴색됐다”며 “집회 금지 시행령으로 아예 국민 소통에 사망 선고를 내리려는 건가”라고 규탄했다.

그는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국민 입을 틀어막는 정부가 국민 마음을 경청하겠다는 건 기만”이라며 “국민 기만이 아니라면 집회 금지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나아가 “국민의 따가운 질책마저도 경청하는 게 대통령이 갖춰야 할 소통의 기본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